

민주 당직 인선 완료... '이재명 친정체제' 구축

'복심'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내정 사무총장·정책위의장 이어 전략기획위원장도 친명계 배치 비명계 "편중 인선 심각" 불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자신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수석 사무부총장에 김병기 의원을 내정하면서 친정 체제를 완성했다.

임오경 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이 대표가) 정진상 전 실장을 비서실 부실장으로 내정했다. 직책은 정무조정실장"이라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성남시 정책실장과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며 이 대표와 십수년간 동고동락한 정책통으로, 이 대표의 '복심'으로 통한다. 현재 의원실에 있는 김남준·김현지 보좌관과 함께 '성남·경기리안 핵심 3인방'으로도 불린다.

이 대표가 정 실장을 정무 총괄역에 배치한 것은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에 맞서 최전선에서 뛰어달라는 주문으로 읽힌다. 여론에서 그를 여전히 '대장동 키맨'으로 지목하고 있고, 검찰도 그를 수사선상에 올려놓은 상황에서 이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자신감이라는 해석도 있다. 아울러 일정과 메시지, 정책 등을 두루 담당하는 정무조정부실장(2명)에도 경기리안 인사들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 인선으로 완성된 임명직 지도부 면면을 보면 이 대표 측근 인사들의 약진이 더욱 두드러진다. 취임 사흘 만인 지난달 31일 당 조직과 살림을 총괄하는 사무총장에 조정식 의원을 기용한 것은 '이재명 친정체제'의 신호탄으로 꼽힌다.

정책위의장에 유임된 김성환 의원 역시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친이재명계로 거듭난 인사다. 사실상 이 대표를 후방 지원해 온 이해찬 전 대표 측근

이라는 점에서다.

대표 비서실장(전준호), 대변인(안호영 박성준 임오경), 전략기획위원장(문진석), 정책위 수석 부의장(김병욱), 조직사무부총장(이해식), 미래 사무부총장(김남국) 인선을 두고도 친명계가 전진 배치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문진석·김병욱·김남국 의원은 원조 친명계로 불리는 '7인회' 일원이기도 하다. 다만 7인회 좌장이자 친명계 핵심인 정성호 의원은 앞서 백의종군을 선언하며 당직을 맡지 않았다.

이에 대해, 당내 비이재명계 일각에서는 친명계 편중의 인선이 심하다는 불만이 나온다. 가뜰이나 최고위(9명) 구성 역시 친명계 일색인 상황에서 새 지도부의 노선을 둘러싼 다양한 목소리가 가로막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당직 인선 결과에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다. 호남쪽 지역직 최고위원을 원외인사로 임명한다 이어 주요 당직에서도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을 사실상 배제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을 불신임한 것 아니냐는 해석과 함께 차기 총선에서의 몰갈이 폭이 커지지 않느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전남지역 모 의원은 "이번 당직 인선을 보면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폭을 가늠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불쾌한 심정을 토로했다. 광주지역 모 의원도 "역대 민주당 지도부 및 당직 인선에서 광주·전남이 이처럼 배제된 적은 없었다"며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보다 친정체제에 방점을 찍은 것은 그리 현명한 결정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최고위가 당내 상설위원회에 친문계 의원들을 두루 배치한 것은 이러한 우려를 그나마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국민통합위원회와 국제위원회 위원장에 친문 핵심인 홍영표 의원과 황희 의원이 각각 배치됐기 때문이다. 또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상임고문에 비이재명계인 고민정·설훈·전해철·송갑석 의원(가나다순)과 박군택 부위원장의 이름이 올랐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가 14일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서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표적감사 금지"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 신정훈 의원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14일 감사원의 정치 개입 방지법(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전 정권에 대한 보복성 사정(査定)과 야당 탄압에 여념이 없는 윤석열 정부를 향한 국민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감사원이 외부 압력이나 정치적 고려에 의하지 않은 고유의 감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특별감찰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감찰계획서 제출·승인 및 감사 결과 국회 보고 ▲감사원 임직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의무 부과 및 위반 시 형사처벌 ▲감사위원회의 의결 공개 ▲감사 대상자에 감사 사유 사전 통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 원내선임부대표인 신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당 차원의 입법 의지가 담긴 사실상 당론 법안이라는 게 신 의원 측 설명이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전임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탈원전) 정책·코로나 백신 수급 관리를 감사 대상에 올리고, 전현직 권익위원장 등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는 것을 두고 '정치감사', '표적감사'라고 비판해왔다. /오광록 기자 kroh@

주철현 의원 "명승 여수 백도 제한적 입도 검토해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여수갑) 국회의원은 14일 '1979년 명승(7호) 지정 이후 출입이 제한된 여수 백도에 대해 제한적 입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전국 129곳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명승으로 지정됐는데, 여수 백도·거제 해금강·서귀포 산방산 3곳만 출입제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어 출입제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39개의 무인도로 이뤄진 백도는 기암절벽이 장관을 이루는 돌섬"이라며 "하지만 명승으로 지정된 이후 43년간 출입이 제한돼 거문도에서 출발하는 유람선을 이용해 해상에서만 관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문화재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취지나 노력에는 동의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공개하는 것 또한 문화재보호법에 명시된 만큼 입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생태 보고인 백도의 가치를 보호하면서도, 그 가치를 탐방객과 공유하는 것이 명승 지정의 취지인 것이다"라면서 "접근 자체를 봉쇄하기보다 제주도 성산 일출봉, 거문도 같은 세계자연유산처럼 제한적인 공개를 통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모델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 '대통령실 진상규명단' 출범... "모든 의혹 발본색원 하겠다"

박홍근 "의혹 묶어 국정조사 추진" 한병도 단장 "국민 제보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14일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을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진상규명단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 및 '관저 공사 특혜 수주' 의혹, '비선 채용' 의혹, '비선 수행' 의혹, 윤석열 대통령 일정 유출 의혹 등 대통령실과 관련해 제기된 각종 문제를 파헤치겠다는 의도로 만들어진 기구다.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검 및

국정조사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성격도 있다.

내달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의혹 검증 및 국정조사 촉구 등 공세를 위한 준비태세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진상규명단 1차 회의에서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민생경제의 주름은 깊어지는데 윤석열 정권은 대책은 고사하고 온갖 대통령실 관련 의혹으로 절망만 안겨주고 있다"며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관련한 국민적 의혹을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의혹을 묶어 국정조사를 추진하

고 상임위에서 전문성을 살려 국정감사에서도 진실을 밝힐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잘못된 총정으로 대통령 내의 자기에 급급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국정조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을 겨냥해 "전체 직원 조회에서 '모두가 대통령이 돼야 한다, 짱들이 어디서 날아올지 모른다'는 엉뚱한 발언을 했다"며 "책임이 있는 참모가 대통령에게 직언하지 못하고 직원에게 대통령이 돼야 한다니 갑갑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진상규명단장을 맡은 한병도 의원은 "대통령실 관련 의혹은 쌓이는데, 정부와 대통령실은 국회

의 요구자료 제출을 온갖 이유로 미루고 거부하고 있다"며 "국조와 국감을 통해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제보도 필요하다. 들려주실 말씀이 있으면 민주당에 제보해달라"고 호소했다.

고민정 의원은 "모든 사건이 김건희 여사로 귀결되고 있다. 사고들이 김 여사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고, 움직이면 다 사고란 말도 나온다"며 "제2부속실 설치에 김 여사를 잘 보좌하기 위한 기구가 아니라, 김 여사가 국정에 개입하지 않도록 장벽을 하나 만드는 일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 / www.ex.co.kr

도공공고 제2022-35호

분묘개장공고(2차)

고속국도 제500호선 광주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된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영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 및 개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공고기간 내에 신고 또는 개장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의거 임의로 개장처리 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건설공사명	소재지	편입지번(원지번)	수량(기)
고속국도 제500호선 광주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공사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월정리	856-27 (856-27)	1

2. 개장사유 : 고속국도 제500호선 광주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편입
3. 공고기간 : 2022. 7. 20. ~ 2022. 10. 19.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4. 신고장소 : 한국도로공사 강진광주 건설사업단 (전남 나주시 중앙2길 24(빛가람동) 4층 ☎ 061-820-5800, FAX 061-820-5896)
※ 매장자와 영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입장서류 등) 등을 구비하여 상기 연락처로 신고 바랍니다.
5. 개장방법 : 유연분묘-영고자가 개장(분묘이장비 및 이장보조비 지급) 무연분묘-공고기간 경과 후 공고자 개장
6.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전남 함평군 월야면 밀재로 1827, 천일추모공원남골당(☎ 061-322-1106)
나.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7. 기타 : 상기 공고기간 내에 영고자 또는 관리인의 신고가 없는 분묘 및 개장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공고자가 개장하겠으며, 상기 공고한 지점에서 식별이 곤란하여 추가 발견되는 분묘 및 공사시행 중에 추가 발견된 분묘에 대해서도 본 공고로 갈음하여 임의개장 처리합니다.

2022. 9. 15.

한국도로공사 강진광주건설사업단장

소중한 통행로 더 좋은 길로 이어집니다

풍수 사주 수강생 수시 모집 및 상담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택,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강(6개월과정)
일시: 2022. 9. 13 (화) 오후7시
장소: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 : 산수오거리 ~ 무등산방향입구우측2층)
수강료: 풍수 + 사주 20만원 (매월)

공개강좌(무료)
일시: 2022. 9. 6 (화) 오후7시
장소: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대상: 누구나 (선착순○○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천기비법 대공개
- 기감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맥파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2246-1508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은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3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24시간 상담가능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사·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